"원전 처리수 안전성 평가 안해"

日 경제산업상, 한국 시찰단 방문 관련

"어디까지나 이해 깊게 하기 위한 대응"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한 한국의 시찰단 수용과 관련해 "한국 내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한국 전문가들의 시찰단 수용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한국 전문가 일행은 23일 현지를 시찰할 예정이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어디까지나 한국측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이라며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올 여름까지 해양 방출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의 일본 파견을 두고 "ALPS(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에서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번 시찰단 파견 결정이 한국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장급 설명회 등의 기회를 통해 ALPS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정중하게 정보 제공이나 설명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로부터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설명을 성실히 실시해 나간다는 취지를 밝힌 후, 두 정상이 한국 내 이해를 높이는 관점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시찰단을 5월 중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정부로서는 한국 전문가의 현지 시찰단 파견,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돼 온 국장급 설명회 등의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성실한 설명을 함으로써 ALPS 처리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尹 "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제도 정비 어려웠다"

국무회의서 1년 소회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년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3분 분량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하겠다는 취지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과 관련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마약이 확산하고 있는데 대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치와 관련해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투기, 금융 투자 사기, 마약 확산 등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뉴시스

"尹정부 출범 1년, 의도적으로 국민 아픔 외면"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아픔이 있는 곳에 정부가 없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족, 전세사기 피해자, 언론노조 관계자, 화물연대 관계자 등을 호명하면서 "모두 다 이 시대의 가장 아픔을 견뎌온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왜 그 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별이 됐는지, 과연 국가와 정부는 거기 있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복합 경제 위기로 정말 타격을 받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애타게 손짓을 해도 정부는 거기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에서 보듯이 정부는 어떤 때에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다"며 "그리고 제왕적 언론관으로 언론을 길들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퇴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윤정부가 아픔을 외면하고 국민과 맞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교류 활성화"

민주 안호영 의원, 동서3축 고속도로 완성 정책토론회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동서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동서3축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동서3축 고속도로 완성은 영호남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환황해-환동해를 아우르는 경제벨트를 조성해 경부축에 쏠려있는 개발 역량을 동서축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주최했고,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등 유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동서 3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는 등 뜻을 모았다.

현재 전북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을 잇는 총연장 282㎞ 구간의 동서3축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무주~성주~대구 구간만이 경제성을 사유로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尹 정권 출범 1년… 도내 시민단체의 시국선언 전북민중행동은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파탄·노동탄압·시대주의 외교정책을 일삼는 윤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윤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각계각층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사진=전북민중행동 제공〉

"정부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평가를"

민주 윤준병 의원,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9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예산·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9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총선 승리 앞장"… 민주 도당 노인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당 노인위원회는 9일 오후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출범식을 개최됐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 최락도 중앙당 전국노인위원장, 전영배 도당 노인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 지역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하 인사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기는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특강에서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일본 정부의 사과없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윤 정권은 묵인하며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단 한마디 사과조차 얻어내지 못하는 굴종 한일 외교를 벌였다고 맹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러한 윤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2024년 치러질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만큼 전북도당의 당원들과 도민 모두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전영배 도당 노인위원장은 "민주당이 살아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며 "현 정권의 무능한 독재 정치를 막기 위해 전북도당 노인위원들은 진정한 젊음을 만들어 내는 노인위원회가 되자"고 역설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고견과 헌신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관과 민주적인 정책 수행과 노인정책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전영배 노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노인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 DMZ 현장 견학

전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파주시 DMZ(비무장지대)평화테마 전쟁 역사 현장 견학에 나섰다.

윤영숙 위원장과 송승용·김대중·김희수·김슬지 위원 등은 파주 임진각에서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을 찾아 전쟁의 역사를 체험하며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라북도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영숙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현재 매우 경색된 상황으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한 민족임을 잊지 않고,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사회 곳곳에서 평화 정착과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현장실습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강화

권요안 도의원, 고교 현장실습 운영·지원 조례 제정 나서

노동인권 교육·실습생 안전보장 의무 조례에 명문화

전북도의회가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다.

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직업계 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 준수사항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부모 등이 참여한 현장실습 협의체 구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운영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성, 학생의 안전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현장실습 방법과 현장실습체 발굴,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권요안 의원은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을 명문화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 안전보장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재보험 외에 학교 공제급여 청구도 가능하며, 실습 중 신체적 정신적 위험 발생 우려시 실습 거부 또는 중지도 가능하다.

또한 조례안 제14조는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등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 점검 의무를 규정했고 교육감은 실태조사 시행과 지도 감독 의무를 진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의 현장실습 과정이 조기취업을 위한 근로 중심이었다면, 최근엔 취업준비를 위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돼 노동이 아닌 배움이 중심이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권요안 의원은 "일선 학교와 교육청, 교육 관계자 등과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면서 "뒤늦게나마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